

역사발전의 견인차 민주노총에 바란다

양 재 덕(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
한국노동운동협의회 의장)

들어가는 말

지난 11월 11일 민주노총 출범은 이 땅의 노동자, 나아가 모든 민중의 감격스런 쾌거였다.

민주노총의 출범은 식민지 시대와 해방 이후 연면히 이어져 내려온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룬 성과이지만 우선 짧게는 87년 이후 우리 노동자들의 줄기찬 투쟁의 성과라고 할 것이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90년의 전노협 결성과 뒤이은 사수투쟁, 업종회의 결성과 사수투쟁, 90년 5월 골리앗투쟁, 전교조투쟁, 병노련 의료민주화투쟁, 언노련의 언론민주화투쟁, 92년 대공장연대회의투쟁, 92년 현총련투쟁, 94년 전지협파업투쟁, 95년 한국통신투쟁을 위시한 수많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투쟁들이 집대성되어 탄생한 것이 바로 민주노총인 것이다.

그러한 투쟁의 과정에는 수많은 노동형제들의 희생도 있었다. 대우조선 이석규열사(87년), 한진중공업 박창수열사(91년), 현대자동차 양봉수열사(95년), 대우조선 박삼훈열사(95년) 등은 온몸을 던져 자본에 항거하고 노동형제들을 일깨웠다. 또한 얼마나 많은 노동투사들이 구속되고 해고되었는가? 대량해직 속에서 생활고와 병마로 목숨을 잃었던 전교조 교사가 또 얼마나가? 이러한 모든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되지 않고 민주노총의 건설로 꽂힌 것이니 감격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노총이 출범한 지금 감격스런 감정에만 머물 수 없다. 출범의 의미를 냉철히 되새기고 이후 어떻게 민주노총을 키워 갈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의 출범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시사점을 던져 준다. 첫째는 아무리 정권과 자본이 탄압하여도 노동운동은 성장한다는 역사 법칙을 민주노총의 출범이 확인케 해 준다는 것이다. 지난 유신 시절과 5·6공 시절 자본과 권력은 노동자들을 혹독히 탄압했다. 당시에 받은 고문으로 아직도 고통받는 노조간부들이 있다. 당시를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쳐진다는 간부들도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그 혹독한 탄압에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대답했다. 다시 시작된 '보통 대통령'의 탄압에 노동자들은 전노협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더욱 비대해진 재벌과 문민정부의 탄압에 다시 노동자들은 전노협보다 더 큰 단결, 전노협과 대공장 노조들과 사무·전문직노조들이 결합한 민주노총으로 대답하지 않았는가? 노동자들은 항상 탄압에 시달리고 힘들어했지만 그러나 그 귀결은 이렇게 늘 더 큰 단결과 투쟁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둘째, 민주노총의 출범은 노조 운동과 역사 발전에서 질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케 한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전노협, 사무·전문직노조, 그리고 대기업 노조들이 결합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들이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합쳐진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민주노총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할 뿐 아니라 민주화와 민족통일의 기관차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야 할 민주노총의 역사적 임무는 당연히 끝 수 밖에 없다. 이에 민주노총에 대한 소박한 바램을 몇 가지 적고자 한다.

민주노총은 전국중앙조직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빨리 확립해야 한다

조합원 50만을 육박하지만 현재의 민주노총은 기본적으로 기업별 노조들의 연합체라는 한계성을 갖는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모든 노조들을 신속히 산별체계로 재편하고 나아가 산별노조의 총연맹으로 자신을 재정립함으로써 그 조직과 구성체계를 완성해야 한다. 그 과정은 협난하겠지만 힘을 집중해야 할 막중한 과제이다.

민주노총의 조직 강화를 위한 두 번째 과제는 정부와 자본이 민주노총을 합법적인 상급 단체로 인정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노동법 개정으로 완성될 것인데 정부와 자본이 노동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힘과 투쟁으로 민주노총 건설을 기정 사실화하고 여론의 힘으로 정부를 압박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의 모든 양심적 민주세력과 튼튼히 연대하여 민주노총 합법화를 위한 노동법 개정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종교, 예술, 법조, 의료, 학계 등 모든 양심적 민주세력과 함께 하려는 노

력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의 조직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과제는 의견 차이로 갈라져 있는 많은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들을 통일·단결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 노동운동은 정파에 의한 성과도 있었지만 그 폐해 또한 적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노동자의 단일 대오가 하루 속히 이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의 조직력 강화를 위한 네 번째 과제는 조직 확대이다. 민주노총 회원 50만은 전체 우리 나라 노동자의 5%에 불과하다. 양적 확대를 위해서는 한국노총의 중간 노조들을 계속 견인해서 민주노총에 결합시켜 함께 해야 한다. 또 이제껏 전노협, 전노대에 포괄되었던 지역의 노조들이 민주노총의 지역본부로 결집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특히 미조직된 사업장을 조직하는 일에 지역노조 결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나 집중적인 사업으로 성과를 내어야 한다.

민주노총 50만이 결의하고 간고한 노력으로 가족을 둑어 넸 때 양적 조직은 바로 늘어날 수 있다. 100만으로 늘어난 민주노총과 50만의 민주노총은 정치적, 사회적 힘이 질적으로 다르다.

민주노총은 사회개혁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 동안 사회개혁투쟁, 민족민주운동, 환경운동 등을 시민단체나 재야단체, 학생들의 전유물로 되어 왔다. 물론 노조들도 참여하기는 했지만 소극적이었고, 그 영향력도 매우 미미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주된 이유는 그 동안 노동조합이 현장과 근로조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던 데 있다. 기업별 노조체계 속에서 노조 집행부는 항상 자기 노조의 임무, 단협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부를 챙기지 않고 외부 일에 신경을 쓰다 보면 노조에서 오리알이 되기 쉽기 때문에 단위노조의 간부들은 외부 문제에는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 중의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어서는 안된다. 1,000여 개의 합법적인 노동조합들이 전국적으로 결집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사건'이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조직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사회개혁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하겠다. 5.18학살자 처벌투쟁, 노태우 처벌투쟁, 노동법 개정투쟁, 선거투쟁, 민족통일운동 등 사회적·역사적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경실련이

나 전국연합단의 일로 들리고 민주노총은 구경만 한다면 노동자는 영원히 이 사회의 책임 있는 지도세력으로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책임 있는 지도세력이 되지 못할 때 노동문제 또한 해결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이제 사회개혁투쟁에 적극 뛰어 들어, 수 백개의 양심적 단체들을 주도적으로 결집시켜 사회를 개혁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

사회개혁의 대상이 되는 사안은 개량적 사안에서 사회구조적 사안에 이르기까지 수 없이 많다. 이 모든 것을 다 개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중심 고리가 되는 주요 사안을 심사 숙고하여 결정하고, 한번 결정한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해결을 하여 민주노총이 힘있고 책임감 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전국민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개혁하는데 민주노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전국민에게 각인 시켜 신뢰를 얻고 모든 양심세력과 함께 이 사회의 민주적인 중심 세력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하나의 사안에 대해 투쟁하여 근본적 해결을 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다양하고도 집요한 전략 전술을 구사하여 하나 둘씩 문제를 해결하여 갈 때 자신감과 국민적 신뢰는 더불어 깊어 갈 것이다. 정치권력은 민주노총을 매우 두려워할 것이고 무모한 탄압을 중지할 것이다. 무모한 탄압에 대해서는 탄압 이상의 후과가 그들에게 되돌아가도록 준비하고 조직하고 투쟁해야 한다.

올해 사회개혁투쟁을 임투에 결합해서 추진하였던 점은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지만 투쟁 사안들은 각 부문 노조의 이해 관계가 걸린 기초적인 것들이었다. 보다 보편적이고 절실하며 전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안을 신중하게 선정하여 임투시기 외에도 계속 투쟁해야 할 것이다.

정책 개발에 힘을 쓴어야 한다.

50만이라는 막강한 조직을 가진 민주노총이 이 사회의 주도적인 민주개혁 세력이 되려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것 없이는 민주노총이 1,000만 노동자에 뿌리를 내릴 수 없고, 국민대중 속에 민중의 희망으로 확고히 뿌리내리기 힘들다. 사회개혁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궁극적으로 노동해방의 실현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려면 조직과 투쟁을 뒷받침해 줄 정책 제시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개발해야 할 정책은 노동 정책과 사회개혁 정책,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대안

적 정책으로 나뉘어 질 수 있다.

노동 정책으로는 우선 자본측의 신경영전략에 대한 대응정책 개발이 급하다. 신경영 전략을 동원한 자본측의 현장 노동자 장악 기도에 대해 노동진영의 대응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다. 둘째로는 구체적인 산별노조 건설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산업별 조직의 건설원칙, 구체적 건설 경로, 사업 내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신속히 건설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그 외에도 단체협약, 노동자의 경영참가, 현장 조직력 강화, 산별 교섭을 가능케 하는 통일적 임금체계, 생계비 모델, 생산체계 변화와 그에 수반되는 기술과 작업조직 변화에 대한 노조의 대안, 경제·경영정책의 분석과 대안, 노동운동 방침 등이 연구되어야 한다.

사회개혁과 관련해서는 주택, 환경, 교통, 교육, 경제, 여성, 지방자치문제 등에 대해 노동자 입장에서 대안을 마련하여 실천과 연결시켜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대안 개발은 어떻게 가능할까?

노동조합 자체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우선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주변의 노동관계연구소, 단체, 학계 등 모든 역량을 폭넓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분산적인 방식으로는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이 책임 있게 기획하고 재정을 마련하여 광범한 전문연구 역량들을 폭넓게 활용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힘있고 역량 있는 노동진영의 연구소를 조직해야 하고 그에 따른 투자도 아끼지 없어야 한다. 관변 노동관계연구소나 재벌기업들의 연구소가 얼마나 많은가?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개선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조운동을 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이러한 요구는 궁극적으로 정치적 세력화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정치권력에의 접근 없이는 이러한 과정들의 실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는 노동조합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임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하면 혼히 노동자의 정당을 연상하고 그 활동은 의회 진출을 뜻하는 것으로 인식하곤 한다. 과거의 실험이 주로 그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란 노동자들이 정치적으로 힘을 갖는 것이고 그 힘을 바탕으로 노동자의 일부가 정당과 의회로 진출하는 것을 뜻한다. 노동자가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려면 민주노총으로 충결집하여 민주노총이 강화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이 조직력도 없고

정책 대안도 없을 때 정치세력화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정치적 힘은 단지 맹목적으로 조직만 확대하거나 상부에서 정책개발에만 힘 쓴다고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계기를 통해 노동자들을 정치적 주체로 자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거창한 정치활동 프로그램을 만들기에 앞서서 일상적으로 노동자들을 정치적으로 일깨울 방침 수립과 지침의 개발이 선행될 필요가 있겠다.

다음으로 정치활동에 나설 민주노총 내부의 주체를 정립하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민주노총 내에서도 일부에서는 정치특위를 구성하자는 안도 있었고, 그 동안 여러 논의가 있었던 줄 안다. 그 구체적인 형식과 내용은 공개적인 토론을 거쳐 합의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중앙 차원의 주체를 정립하는 일과 더불어 지역본부 차원에서 정치활동에 힘을 기울이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지역본부가 그 지역의 문제에 적극 참여하여 제민주세력과 힘을 합쳐 그 해결을 주도해 내고 지역주민들에게 신뢰성 있는 조직으로 부각되는 일은 향후에는 더욱더 중요성이 커 갈 것이다. 이렇게 전국과 지역의 두 경로를 통해 민주노총 강화와 함께 정치세력화의 토대를 구축해 나간다면 머지 않은 장래에 본격적인 정치세력화의 채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민생, 민권, 민족문제에 대한 투쟁에서 제 민주세력과 적극 결합하면서 사업을 전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올해 통일투쟁이나 5.18특별법 제정운동 등에서 민주노총이나 현장노동자들의 참여는 괄목할 만한 것이었으나, 제 힘을 다 발휘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일상적으로 함께 의논하고 함께 투쟁하려는 태세가 필요하고, 또, 그러한 논의 구조를 만드는 일에 민주노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힘든 일이 많겠지만 11월 11일의 열기와 자신감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활동과 투쟁에 임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